

##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방안 간담회 \_100226

- 정리: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 발언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안된 핵심 내용을 명료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발언 순서에도 관계없이 내용별로 분류했습니다. 잘못 정리된 게 있으면 의견 주세요~

### 1. 상황 공유

#### [자료집 발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현황 : 박진
  - 경남학생인권조례 현황 : 고영남 정리, 박진 대신 발제
  - 광주학생인권조례 현황 : 박고형준 발제
  - 각 지역의 교육감 선거 상황과 학생인권조례 : 공현 발제
- =>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발제문 참고

#### [추가 발제]

- 서울지역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 상황 : 전누리 발제  
: 서울지역의 경우 청소년 단위들이 모여 공동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자치활동 강화와 학생회의 구성 등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각 단위들의 계획]

- 전교조 경기지부 : 딱히 계획은 없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해나가겠음.
- 좋은교사운동 : 정책 평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하여 공동 공약을 제안하고 그걸 지지하는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조직해나가면 좋겠음. 학생인권조례를 독립적 아젠다로 만들 수 있는 계획도 고민할 필요 있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 올해 핵심 3대 사업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운동의 대중적 전개를 결정. 함께 하고 있는 범국민교육연대에서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인권조례 운동을 설정. 조례 제정은 최소 조건이라는 것, 올 교육감 선거를 넘어서는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위로부터의 시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 조례 제정 운동이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과 입시폐지 운동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 등의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싶음. 전국화 방안을 자체 고민중이었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아수나로 수원지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학생 자문기구로 학생참여기획단이 구성되어 약 5백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음. 교육청에서 입법 발의하고 나면 교육위 압박 서명운동이나 홍보 캠페인 등 학생들의 주체적 움직임을 조직해나갈 생각. 아수나로 서울/인천지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학교 앞 선전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서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
- 광명시 명문고 학생회 : 야자 선택권 보장, 두발 길이 자유 등 학생인권 관련 공약 내걸고 당선.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탄압을 많이 당했음. 학교운영위원회

의 표 조직 방안 등 조언을 구할 수 있으나 해서 참여.

○ 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 25일 내부 워크숍 진행했고 3월 중순까지 2천명 정도 준비위원을 모실 계획. 경기지역 32개 시군 중에서 15개 지부가 이미 건설. 학생인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음.

○ 군포시민단체협의회 : 군포시에서는 2003년 청소년인권도시 선언이 있었음.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청소년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교랑 한발 떨어져 있음. 4월중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제안서를 각 정당 지자체 후보들에게 보낼 계획.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공동 성명서 내기로 결정. 군포 교육희망네트워크에도 제안하고 있는 중. 4년마다 한번씩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계속 압박해나갈 예정.

○ 경기지역 교육 공투본 : 공투본에서는 27일 내부 워크숍 잡혀 있는데 2010년 계획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잡아서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임.

○ 경기 참학 : 이후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사업 계획 확정될 예정. 논의할 계획.

## 2. 주요 논의 내용

###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대응 방안

- 경기 교육감의 선택에 따라 타 지역 교육감 후보들이 이번 선거 공약에 학생인권조례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달라질 것임. 현재 김상곤 교육감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경기지역의 경우, 무상급식과는 달리 학생인권은 밑바닥의 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 몇 개 단체도 의기투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교육감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

-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보수진영에서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전면전을 펼칠 계획.

- 각 단위에서 할 역할은 최대한 하되, 시기별로 비상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기 지역단체들끼리라도 소통 구조가 구축될 필요 있음. 시기별 쟁점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도, 행동도 준비되어 있어야.

#### 행동 차원에서는...

- 우선 3월 7일 예정된 교육청 조례 공청회 이전에 여러 단위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 그래야 공청회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교육청 입법발의안이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B안보다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 자문위 안도 아쉽다, 보다 나은 안을 만들라는 압력을 넣어야 함.

- 교사, 학부모 선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음. 그래야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음.

- 앞으로 도 교육위 차원에서 좌절됐을 때, 도 의회 차원에서 좌절됐을 때 등등 각 시기별 세밀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함. 도교육위랑 싸움 붙을 때는 무상급식 싸움에서처럼 붙을 붙이는 게 중요.

- 학교현장으로 파급될 수 있는 방안, 홍보 절실. 여러 차원의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중적 홍보가 필요함.

- 교사, 학부모들은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 학생들 스스로가 많이 나서야 함.

### 다른 차원에서는...

- 사회적 수준에서는 법질서 강조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고,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인권은 반교육, 반교권이라는 구도가 여전히 존재.

- 교권 vs 학생인권의 대립구도를 깨는 게 중요. 교사들의 반감이나 우려를 어떻게 꺾 수 있을지 고민해야.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현장 분위기 고려했을 때 효과적일 것이라고 봄.

- '김상곤이 애들 데모나 하라고 학생인권조례 만든다'는 식의 구도를 깨고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음.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학부모 공감대가 높은 편이므로 두발자유나 그런 부분보다는 학생인권조례의 다른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음.

- 대중적 접근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정서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돌파해야 하는 지점이 있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우려들을 민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음. 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짜 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는 않아야.

## 2)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전국화 방안

- 교육감 선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감 선거를 주요 계기로 활용할 필요는 있음.

- 각 지역별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서고 나면 이후 공동 공약, 공동벨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공동 공약에 포함되고, 그 후보들이 당선되면 엄청난 비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후보들과 선거캠프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받아 안도록 할 것인가가 관건.

- 정치권 눈치만 보다보면 일이 되지 않음. 오히려 원칙적으로 다가가야 정치권이 우리 눈치를 보게 돼 있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를 전국화하는 계기로 교육감 선거를 생각해봐야겠지만, 선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 행동 차원에서는...

- 학생들이 졸업한 선배들 조직해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표로 조직되어야 후보들을 움직일 수 있음.

- 급식운동도 초창기에는 대중적 이해가 낮았음. 지역별로 대중조직 만들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치인들의 관심도 얻게 됐음. 학생인권조례 운동도 마찬가지일 것.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 합의가 어려운 내용이 더 많다는 것. 선거기간 중에는 공동 공약으로 들어가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기간 중 공론화가 중요.

- 학생인권조례 전국화를 위한 운동본부 등 조직들을 갖추는 게 필요할 듯. 이 조직의 공동명의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나 선본에 학생인권조례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협약을 맺는 방식도 가능할 듯. 지역별 운동본부로까지 확장되는 것도 중요. 청소년인권

대한 상이한 시각을 좁혀나갈 수 있는 토론, 워크숍 등이 지속되어야. 핵심 내용을 담은 매뉴얼도 만들어지면 각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듯.

### 3. 논의 정리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 1) 3월 7일 공청회 등 이후 일정별로 필요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공동행동에 나서 는 것이 중요. 다산인권센터가 중심이 돼서 제안해주면 좋겠음. 각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자.
- 2) 여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각 단위에서 필요한 설명회, 워크숍 등 조직하자. 필요한 자료나 사람은 적극 서로 자원하자.

#### - 전국화 방안 관련해서는

- 1) 구체적 조직 건설 등 공동 합의는 현재 상태로는 무리. 이미 지역마다 교육감 선거 대응 틀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들 조직에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체들을 명확히 하거나 공동행동을 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 다만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오늘 모인 단위들로부터 시작해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틀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가자. 메일링리스트 만들자.

#### - 후속 모임

☞ 3월 13일(토) 오후 2시/ 장소는 수원역 근처 (추후 공지)

☞ 구체적 계획 갖고 다시 모이자.

## 학생인권조례 전국화 방안 간담회 \_100226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및 경남, 광주 상황 공유 (박진, 고영남, 박고 발제)
- \* (각 지역의)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 (공현, 누리 발제)

-----토론

전교조 경기지부 : 딱히 계획은 없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좋은 교사 운동 : 정책을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전국화 방안이니까... 여기 분들이 모든 후보들이 받을 수 있는 인권조례 등 공약을 만들어서 그걸 지지하는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좋겠다. 전국적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주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감이 받을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지방선거에 묻혀서 사람 머리 속에 그 사람 이름이 기억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좋은 나쁜 기억에 남아야 하는 상황... 5, 6개 지역 후보들만 발표하고 추가될 때마다 그걸 더 발표하면,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저희도 질문을 할 때 지난번에 두발자유화할 거냐 등을 했는데 그거에 점수를 매겼다 학생인권 에 대해서 몇 점이다... 이번에 아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학생인권조례 할 거냐고 물을 수 있어요. 이걸 제 개인적 생각이고 할 건지 말 건지는 단체에서 정해야 할 텐데... 이곳에서 그렇게 활동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 이슈로 떠올랐을 때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단체들이 많을수록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독립적 아젠다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평등학부모회 : 핵심 3대 사업 중 하나를 교원평가 저지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공동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고 결정했다. 범국민교육연대에서도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청소년인권조례 운동을 설정했다. 인권조례 운동을 경기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국화시키기 위해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기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서로 공유하는 자리면 좋겠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청소년인권 문제가 조례제정 운동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자명한 사실 같다. 그럼에도 최소 수준의 조례도 없는 게 비참한 현실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이 가진 의의가 참 남다른 조건이다 한국 사회에서... 제한적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방법과 관련되어서인데, 설사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된다 하더라도 위로부터의 시혜, 이런 방식이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중적 운동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학부모들도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교육 문제의 동등한 주체로, 사회적 연대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위정자들이 시혜로 던져주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3월 10일에 결정을 하겠지만, 여기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 전국적인 수준의 아래로부터의 인권조례 제정 운동 방식으로 대중운동 방식으로 가는 것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가 나온다면 제안을 하겠지만, 그뿐 아니라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아래로부터의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대중적 전국적 운동 필요.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다. 근본적으로 옥죄고 있는 경쟁의 문제,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에 대한 중단 없이 인권조례만 제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입시폐지 일제고사 반대 운동 등등 인권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교육상황을 개선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청소년인권 이야기하면 교권 침해라고 하고 일제고사랑 학생인권조례 따로 가는 식으로 파편화되고, 인권조례 제정하는 분들이 교원평가제 그냥 두는 것에 좀 고민이 있다. 같이 상승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 자리가 없으면 범국민교육연대나 평화 명의로 전국화된 운동을 제안하려고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 아수나로가 나름 전국 단체인데; 수원지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수원지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수나로 수원지부 핵심 가져갈 활동이 학생인권조례 관련 활동이 아닐까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면서 학생참여기획단 활동이 있었는데, 경기도 지역 학생들이 500명 정도 모여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 내고 공청회 참가해서 공유하고 하는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 안들이 나오고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와서 얼굴도 좀 뵈고 앞으로 만나서 같이 잘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 학생참여기획단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학생들과 같이 교육위원회에 요구한다 제대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거나 학생들이 직접 조례에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같이 홍보활동 캠페인을 통해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구요. 수원지부가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계신 분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것들 잘 진행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굴 : 자문위원회 학생자문기구 형태로 구성된 학생참여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학생인권조례 서명 캠페인 등을 추진하실 계획이란 말씀 해주셨는데.. 전국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례 제정을 조직할 방안 등도 이후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네요.

명문고 학생회장 : 공약으로 낸 게 인권 관련 공약을 낸 건데, 야자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두발 길이만이라도 자유화되도록... 학생들도 지지를 많이 해줬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교장실까지 불려 가서 당하고 1학년 때도 역사 교과서 반대 서명운동 했다가 또 서명용지 불태워지고 고초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하지 않게 절차 지켜 하려는 생각으로 교칙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1단계가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하고 2단계가 학운위 통과하고 3단계가 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저희 의견이 되어도 학운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광명시의원이 학부모라서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랬는데, 8분 중에 3명을 구했는데, 과반수가 되어야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조언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구하려고 오게 되었다.

전교조 : 교육희망네트워크 준비하는 .. 평범한 입장에서 교육 이야기해보자. 대단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문제고 삶의 문제니까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횡적인 구조니까 그렇게 가보자고 해서 공부 좀 하는 시간이어서, 이후에 누구나 학생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경기도 교육이 좀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3월 중순까지 2000명 정도 준비위원들 모시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3월 중순 이후로 2000명 정도 회원들이 모습을 좀 갖추고 해보자... 31개 시군 중에 15개가 어제 참석을 했고, 앞으로 한 20개 정도는 될 것 같습

니다.

개굴 : 거기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가 잡고 계신 정책? 바라는 교육 이런 것들의 구체적 모습들은 건설과 동시에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전교조 :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있고 가장 호응을 받은 것 중 하나가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에 대해 편하게 다가가서 자기 아이 문제 내가 생각하는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것 무료 학부모 교육 상담 체계 운영한다는 게 학부모들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나름대로 깊이 있고 준비하고 고민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있을 테고 매치를 시켜주면 갈급해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 운동이나 학생자치, 거기 학생인권이 들어가겠죠 그런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아수나로 : 아수나로 서울지부, 인천지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한다는 서명 받아서 3월 말 4월 초에 발표할 예정.

경남 지역은 교육감 후보와 아수나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조례 제정ㄷ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얘기. 휴대전화금지조례 만든 후보가 무슨 학생인권이나, 하는 불만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 보러 온 입장인데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청소년ㄷ르이 활동하고 있어서 접하는 일이 많이 있다. 인권조례에 대해 입장이나 그런 걸 정리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김지수 : 아래로부터의 움직임들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포시가 2003년도에 청소년 인권자치선언이란 걸 했다. 지역에서만 회자되었었는데... 그런 움직임들도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청소년자취위원회, 시장 등이 참여해서... 선언적 의미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나서 청소년인권조례를 조례제정 운동을 염서 보내기 등 이런 걸 하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만들어내진 못했구요. 재작년부터 다시 청소년 조례 제정을 해보자, 인권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시도가 되었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랑 맞부딪치게 되는데, 청소년인권조례는 학교랑 한발짝 떨어지면서 모든 청소년들의 인권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안을 청소년 주체들하고 같이 만들기는 했는데요. 지자체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조례 제정 안으로 청소년들이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를 했는데 인권조례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출하는 걸 하기로 했고 조례제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자고 했고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성ㄷ체를 만들어서 몇 년이든 가동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자는 건데 조례 제정 제안하는 안에는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 같아요. 갖고 있는 청소년들 명단이나 단체나 수련시설 활동하는 청소년들한테 문자로 다 보내서 인권조례 안으로 넣었으면 하는 걸 문자로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청소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을 협의를 마무리를 했어요.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이 추동을 할 것 같고... 적어도 4월 안에는 시장 입후보한 후보자들한테 다 보내고, 시의원 출마자들한테도 보내고 정책 토론회나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언론사나 이런 데서 정책 토론회를 할 거 같은데 한 포지션을 해서 한 꼭지 맡아서 청소년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형태의 것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군포지역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이야기해서 합의가 끝났어요. 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이 100여 명 되는데 네트워크라는 데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네트워크 형태로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명서를 내긴 어려워서, 그렇지만 시민사회협의회에서 논의된 건 협의회 이름으로만 성명 내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어떤 식의 교육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글너 것들 만들어보려고 해서 군포 교육희망네트워크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개인이라도 참여할 사람들 받자고 해서... 오늘 성명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확인을 다 못했는데, 개인 명단 100여 명 넣으면서 다음주 정도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봄을 일으키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회자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시설 이용 청소년들 인권 규정을 저희가 권리 규정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공청회가 다음 주에 한 번 잇을 거구요. 만드는 걸 관장이나 시설장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기보다는 청소년들이 그런 거 고민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실시가 됐구요. 의견을 좀 더 듣고 3월 중순 정도 규정에 대한 공청회랑 투표 등이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지고 있구요. 올 한 해 그것과 더불어 청소년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2년, 6년에 해서 거의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올 해도 3월에 실시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 최대한 청소년 분들에게 다가서기 편하고 적절한 것이 실태조사..

개굴 : 여러 단위에서 입장을 발표해주시면 3월에 공청회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 :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 학생들이 체벌하지 않는 상황에 적응을 못하더라. 그러더니 교장선생님이 불러서 나한테 답임하지 말라고 했다. 성적이 낮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우리 반이 6개 반 중에 2등 정도를 했는데... 컨닝해서 점수 올라간다는 식의 소문. 감독을 강화하라고 했지만 성적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왜냐면 학부모들이 매를 안 댔다고 항의할 거라면서. 입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고 애들 관리가 안 되지 않았는데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수원지역에서는 90% 이상 학부모들은 우려한다. 실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할 것 같다.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성적하고 두발 체벌하고 관계가 거의 없다고 사례를 들어가며 풍선 나눠주기도 하고... 스티커라도 나눠주고 하면서. 실제 초등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면 대단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저희 애도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가는 거 무서워한다. 두발규제 등... 그런 생각이 든다.

초등 교사 : 초등 정서... 매를 잘 듣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억압체제로 바뀐다.

??? : 학생들이 많이 나서줘야 할 것 같다. 학부모단체 등은 소극적이다. 무상급식 추진본부 만들잔 이야긴 나오지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는 안 나온다. 실제 압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회에서 고등학교 바로 졸업한 선배들, 학생회에서는 선배들에게 연락해서 누구를 찍자고 하는 운동들 가능하지 않을까? ※ 경북만 시도교육감 민주 후보가 안 선 상황. 공동 공약, 공동벨트 추진하지 않을까 싶음.



박진 : 학생인권조례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실제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게 실제적인 건지 아니면 우려가 너무 많은 건지...

교사 : 사회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 학생들을 안 믿는다.

박진 : 믿으면 되고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건데... 만들기 전에 뭐가 될까 두려워 못한다 이래서. 이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고, 공동 벨트에서 주요 공약이 되게 할 건가 이것도 필요한 논의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인권조례를 공동 공약화하자고 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게 할 건가 초보적 논의부터 해야 할 것 같구요.

좋은교사운동 :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에 뽑아야 하는 숫자가 무지 많다. 1순위 문제는 표계산 전에 내 이름을 사람들이 알게 할 건가가 문제다. 욕을 먹더라도 나오고 싶은 심정이 대다수다.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전국적인 어떤 게 뜨고 그게 언론에 주목받는 일들을 잘 해 나가시면 한 지역에 두 후보가 달라 붙을 수도 있다. 군소후보들 중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너무 우려하시진 마시고... 얼마만큼 잘 받을 수 있게 띄울 수 있는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다.

공청회 때 참석한 제 소감은, 일단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놓는 걸 어떻게 깨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가정과 학교의 역할분담 구조로 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왜 학교 교사가 머리 색깔이나 귀걸이 같은 걸 관리해야 하나. 자기 자녀의 옷이나 복장을 자기 자녀와 이야기하고 성장하게 도와줘야 할 텐데, 교사들은 그 부분에서 자기 역할이 줄어드는 거니까 더 좋아할 거다. 이런 역할을 학교가 과도하게 가정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학생인권에 대해 너무 부르르 떨면서 투쟁적 어려운 분위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참학 :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가 지역 명문학교라고 머리 반삭에 두발단속 받았다. 졸업할 때 재학생 아이들이 송가 부르면서도 그동안 머리 자르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게 되면 하지 않을까 싶다. 참학 활동하면서도 지회가 신생 지회고 그래서 바빠서 잘 못했는데... 부모들은 인권과 교권이 대립한다는 생각조차 없다. 인권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요새 엄마들은 아이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못 믿는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못 믿고 학원도 못 믿는다.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그 과정의 사회적 환경도 못 믿는다. 엄마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부분은 이런 걸 건드려서 하면 굉장히 와닿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요새 엄마들은 잘못된 교사들과 싸울 준비가 된 엄마들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실을 찾아서라도 방법 강구하려는 엄마들이 많아졌구요. 지적 수준도 올라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에 저도 여러 가지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보수적 교장 선생님들이나 김포의 교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딱 한 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애들이 데모나 하라고 학생인권조례 만든다고. 자세한 공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마디로 보수적이거나 걱정 많은 분들을 데모나 하라고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그 말 한 마디에 다 넘어간다. 학부모들한테 학생인권은 데모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못 틀고 추운 겨울에도 히터도 못 트는 그런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런 부분이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걸 주지시키는 그게 나오면 학부모들은 바로 거기에 공감합니다. 대중화 시킬 때는 굉장히 쉬운 것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겪고 있는 피해가 있어요. 두발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니까 학부모들은 50:50이더라구요. 남편부터도 애 머리 길면 답답해죽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적 받은 교육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릴 때 겪었으니까 4, 50 되면 바뀔 것 같은데도 옛날에 단정했던 게 좋아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을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부모들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을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저희 지회는 중고생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애들인데 보통, 우린 이렇게 공부했다 이걸 후배들과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 3월 마지막 토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많이 올 것 같다.

경기 교육공투본 : 공투본 내에서는 일제고사도 있고 교평도 있고 학교 비정규직도 있고 장애인 교육 문제도 다 포괄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도 같이 하려는 의도는, 여기서 이야기 한 분들이 잘못되었단느 게 아니라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도 나와 있는데, 공투본 내에선 구체적으로 문구 정리는 안했지만 그것도 반대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의 인권이 학부모의 도리나 이런 걸 위한 접근인 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거구요. 이걸 학생의 인권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에 대한 한 번의 확인인데. 선거와의 연계 방안인 건지. 지금 이야기는 선거 준비하는 걸로 가는 거에 대해 안 그러면 좋겠다는 게 잇단느 거고. 선거와 구분해서 학생인권은 학생인권으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경기 공투본 입장으로는 이런 간담회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굴 : 두 번째와 관련해서, 이 자리는 교육감 선거 대응을 위한 건 아니고, 목표는 학생인권조례를 전국화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운동으로 끝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구요. 앞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한날 : 저도 말씀하신 분 의견에서 첨언을 좀 하자면 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을 같이 하면서 선거 시기가 겹쳤는데 선거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이 선거를 가져가냐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기해주신 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선거 시기에 이걸 가져간다고 해서 선거 전술을 논할 때 우려되는 지점은, 투표권을 가진 건 학부모 교사 이런 어른들이고, 이 이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논의를 가져가는 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 청소년 권리를 부모나 교사가 대리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투표권 가진 사람들을 공략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다 학생인권조례 추진할 때도 학생참여기획단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논의 흐름들이 학생들과 괴리된 채 가는 게 있었고... 여러 조건 때문에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 많은 우려들, 아까도 나온 두발 풀면 성적 떨어질 거다 하는 등등등의 우려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우려들을 민망하게 하는 방식으론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 우려를 설득하듯이 가는 건 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 같다. 좀 그런 지점을 전환해야 하지 않나.

박고형준 : 의식과 정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 실천들이 도모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지점 같은데. 광주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

습한 건, 각각 태클에 못 이겨서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거죠 우리가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했는데. 우리들마저도 교사 인권 학부모 인권 이야기하니까 학교 인권조례 만들자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라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다가서야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다. 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정치권의 대상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던져주는 강하게 대쉬하는. 우리 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계속 던져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는가. 교육감 선거 통해서 학생인권조례가 된다는 기대는 떨쳐버리고, 장기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그게 교육감 선거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감 선거도 이슈의 계기로 삼고 있고, 교육위원 발의를 하고, 안 되더라도 바로 우리는 시민들 서명 받아서 시의회 다이렉트로 넣어버리자 그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학생인권조례 원안에 대해 우리 스스로 훼손시키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경기도도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시민사회 운동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등학부모회 : 논의를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당면한 6월 교육감 선거라는 공간에서, 어쨌든 인권조례 운동 제정 내지는 조례 운동을 대중적 이슈나 쟁점으로 만드는 게 교육감 선거 활용이 가능하면 어떻게 접근할지 여지가 있다면 논의를 해야 하구요, 서울시민주진보교육감 정책위에 들어가 있는 제 머리 속에는 당연히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소속 단체들도 설득해야 하고 후보도 설득해야 하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도 설득해야 하는 거죠. 설득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쟁점이 나올 거예요. 유권자들, 학부모들한테 인권조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하는 과제가 추가적으로 나뉘지는 건데, 그게 뒤섞여서 논의가 정교하게 안 되는 것 같다. 6월 교육감 선거에 고민하는 걸 반영시키는 게 좋다고 전제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건지. 이들이 민주진보교육감이려면 무상급식 받아라, 하는 사회적 협약 방식을 할 건지 토론했으면 좋겠구요. 후자는 다 해소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만큼 포지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보시기에 학부모들의 친권, 보호자의 권리로서 학생인권 접근하는 게 대단히 거북스러울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동반자적 관계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벽을 깨는 문제를 어떻게 넘을 거냐 하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개굴 : 앞서 제기된 우려나 입장 차이는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사안 터질 때마다 논의하면서 좁아져가고 있는 쟁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오늘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고 다른 논의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후속 활동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다보니 당면한 교육감 선거 개입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제안되었던 이야기 몇 개만 정리해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학생들도 학부모도 교사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한 증명되지 않은 우려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염두에 뒀야 할 건 사회적 수준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이 부분이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전반적인 사회 보수화 분위기나 법질서 강조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을 불량집단으로 묘사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되었던 것 같고, 사회적 수준에서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는 거 같구요. 학교 교육 중심으로 보자면 학생인권은 반 교권이냐 반 교육이냐 이 쟁점들을 넘을 수 있는 담론 차원에서 그런 걸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체적 실행 방안들은 이런 우려나 구도를 깨기 위해서 학생들의 전면적으로 서명이나 캠페인 이런 걸 전개할 필요가 한 편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교사나 학부모단체들이 이런 구도에 다른 입장 그런 우려들이 증명되지 않은 우려라는 거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조직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작업 같아요.

교사 :

박진 : 학생인권운동에 대한 논의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섞여 있는데요. 이런 논쟁 지점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학생인권운동을 풍부화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소통할 건가 소통 구조를 두는 것... 내용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구요. 이 운동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펼치고 당면한 선거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만약 공동 공약으로 15명이 학생인권조례를 공동으로 내면, 10명이 당선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비약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전략으로 교육감 선거 선거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 약속들을 몇 가지 정하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사 2 : 논의 과정에서 공투본이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사실 발언 안 하려고 했어요. 자리 성격 자체에 대한 부분이, 나온 김에 이야기해야 한단 생각이 들구요.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서 인권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우파들의 공격에 대해 방어 전략을 짜는 것과, 교육감 선거 때 뭘 할 건지 논의하는 게 이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봐요. 분리해서 아예 전자만 논의하든지. 후자는 책임지고 이야기하시는 성격이냐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발언 한 마디 한 마디 조심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학생 동지들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그 외 선거 때 뭘 할 거냐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전략 짜는 과정에서도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안병만 교과부 장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고 수도권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구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입안해서 올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지만 통과시키려는 운동 전략을 짜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도 교육위 좌절되면 어떻게 할 거냐 도의회 좌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시기별로 대응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평화 계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교육감 선거 판에서 인권에 대한 게 공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교육감 당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교육감 논의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성격을 나누고 해야지 막연하게 공론의 장에 가져가서 논의하고 이런 성격의 자리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구요.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후자의 문제 선거 전략이나 이런 이야기는 요 테이블은 아닌 거 같구요.

누리 : 후보한테 학생인권조례를 받아안게 할 것이냐가 우리 전략인 것 같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상황 속에서 경기도 지역 단체들의 움직임. 그게 계획이 뭐냐는 좀 궁금합니다. 단위들 정보를 알려주시면 이야기하기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진 : 고민이 거기 있는 거 같다. 대중운동이 무르익어서 교육청에서 나오고 하면 삼박자가 맞았을 텐데. 이를 템너 수원에서 학생들이 심하게 당했다고 해도 거기 붙는 단체는 다

산인권센터 아수나로 이렇게 싸워왔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 던지니까 밑바닥이 움직이지 않아요. 무상급식 터졌을 때는 솔직히 모든 단체가 붙어서 했는데, 학생인권조례 안 되거든요. 해보려고 해도 흐름이 안 만들어지는 게 고민입니다. 광주나 경남이랑도 다른 건데. (광주도 같아요;) 대여섯 단체도 의기투합이 안 되는 상태란 거죠. 전교조나 참학도 안 붙는다는 거예요. 단체들 수준이라도 사명감을 갖게 만드는 게 경기도 지역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아무래도 먼저 했던 단체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겠죠. 친절한 제안을 좀 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이 자문위원회 B안보다 후퇴되지 않는 안이 되게 하는 게 1차적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단계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안도 아쉽다보다 나은 안 만들라고 압력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도교육위랑 싸움 붙을 때는 무상급식 싸움했듯이 붙을 붙여주셔야죠. 7일에 입버 예고되면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보수 단체들은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맹공격할 거예요. 그걸 준비를 했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부족하다. 더 잘 만들라고 그 목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번 쟁점에서는, 그 쟁점 만들어주는 거, 적어도 3월 말 도교육위에서 제대로 싸움 만들 과정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 어떻게 만들 건가. 학부모들 선언 해주셔야 하고 학생들 캠페인 하고 당사자 목소리 내셔야 하는 거구요. 그런 이야기가 좀 되면 좋겠다. 경기도는 죄송한데 없어요.

경기 공투본 : 공투본에서는 내일 워크숍 하는데 2010 계획으로 잡아서 같이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아마 할 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100% 만족스럽지 않으나,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무상급식처럼 보수적 교육위원이나 관료들에 의해 막힐 때 단호히 대응하려는 준비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실은 저희는 운동체 자체가 주체들이 해야 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모든 소속 단체는 교육공투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참가단체가 뭔가 할 때 공유하고 공동투쟁을 하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도 7개 발제 중 한 파트로 움직임에 대해서 발제자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 온 건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추후에라도 논의를 하고 주체들과 어떻게 만날까도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 고민 속에서 학생인권조례 투쟁에 대해서 교육 관료들이나 보수 단체에 의해 막히는 부분에 있어 응당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응을 계속 할 거다 꾸준히 가져갈 거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개굴 : 경기 지역에서 전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사안이고. 제안해주신 건 각각 시기별로 구체적인 행동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경기 지역에서 참학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결정하는 자리가 이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각각 단위에서 할 역할은 최대한 하되, 시기별로 비상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기 지역 단체들 사이에선 임시적인 네트워크 소통 구조라도 구축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기별 쟁점에 대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논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사실 자문위원회 차원에서 조례안 발표될 때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공격해온 바로 그 지점에서 동일하게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준비된 논의들을 압축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동의가 되시면 소통 구조 이어가면서 경기지역 조례가 안착될 수 있는 대응을 조직하자. 경기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논의가 마무리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 개입 전략과 지속적 대중 운동화 방안 논의로 초점을 이동해서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좋은교사운동 : 찬물 끼얹는 이야길 하면 조중동이 때려주면 차라리 감사하겠단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비리와 관련해서 기자들이나 언론 보도 흐름이나 교과부 행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 때려서는 김상곤 오히려 키워주는구나. 급식 때렸더니 김상곤 띄우는 게 됐거든요. 학생인권조례 막 쳐주면 김상곤이 뜰 수 있거든요. 저쪽 분위기는 가닥을 비리 쪽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거 떠도 조중동에서 암 말도 안 할 수 있구요. 지금 분위기는 권수가 있으면 비리 꼬집어내서 가려고 하는 게... 조용히 갈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준비도 하면 좋겠습니다.

송원찬 :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초기 조례 제정 시작할 단계에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한 부분에서 개별 경기 지역에서 움직임 단위들의 멤버십은 형성이 되어 있으니 조직을 만들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다만 집중될 시기들을 명확히 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유했던 단위들이나 진행상황 흐름을 아는 분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역할들을 해달라는 걸 집중해서 하는 것들을 소통하는 것으로 해서 힘 있게 추진을 모아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석 서울 교사 : 선거와 관계없이 금년에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해보자, 그 계기는 물론 경기도죠. 경기도 경남 이렇게 있는데.. 전교조 안에서 해보자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물론 진행되고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갖는 중요성이라든지 이 시기에 이것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급식운동 오래 했는데, 급식운동이 지금은 대중적으로 같이 할 운동이 되었는데, 초창기 이럴 때는 직영이니 친환경이니 무상급식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더구나 무상급식은 이해를 못하고. 근데 꾸준히 2, 3년 3, 4년 광범위하게 지역에서 대중조직들 만들어지고 끊임없는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런 거들에 대해 정치인들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으로서는 일반적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도 사실 경기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교육감 선거 과정 속에서 공약화되고 그런 분들 당선되고 하면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학생인권조례 내용 들어가면 합의 안 되는 부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선 급식하고 물론 다르죠. 사실은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 기간에 공약 이것을 조례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해도 막상 당선된 뒤에 어떤 내용을 제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선거기간 중에 물론 분명히 공동공약도 만들어지고 후보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상가능한데. 문제는 그 뒤에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내는 건데. 그런 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론화해내고, 막상 실제 할 일은 선거 끝난 뒤에. 내용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마침 선거운동 기간인 게 도움이 된다. 대중운동의 틀을 만드는 게 지금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급식 그런 거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 하고 했다. 한나라당이 대다수인 시기에 했다. 우리가 대중운동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전국화 방안 반갑다. 이슈화시킬 계기는 선거가 되지만 대중운동 단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한다.

평등학부모회 : 경기도 차원에서 3월 등 대응하는 건 다산인권센터 등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실 거라고 보고, 공현 씨에게 연락받아서 평학이든 성명 필요하면 조직할 생각이예요. 근

데 도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거 다 안다는 거죠. 저는 경기도 조례 제정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국적 운동으로 나아가는 전망을 못 가지면 지역에서 어떤 시도를 했다가 사그라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국화하는 데 부족하나마 저희 단체나 범국민교육연대가 역할을 해야겠다. 하나는 명칭 어떻든 학생인권조례 전국화를 위한 운동본부를 제안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성하잔 게 아니라. 그걸 제안한다는 게 실천적 결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이구요. 운동본부는 하나는 6월 지자체 선거 관련해서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들에게 후보 준비 하는 선본이나 추대위원회에 공동 명의로 인권조례 운동을 공약으로 낼 수 있을지 타진을 하고 가능하면 협약을 맺어서라도 운동 본부와 운동을 해서 받아서 조례제정 운동한다는 걸 민주진보교육감들이 하면 최선 성과라고 봐요. 근데 현실을 저희 바람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당선 고민하거나 유권자 표 관련 고민하다보면 인권조례 운동이 명분은 중요하지만 선뜻 선택 못할 수도 있어요. 넘어야 할 벽은 많겠지만 제안조차 안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분들 선거만 바라볼 거냐 그래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함께 뭘 해야 하나면 운동본부를 지역으로, 수원 포함해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든 학부모단체든 연대체가 되었던 자기 지역에서 운동본부 만드는 걸 결의하고, 몇 가지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해 내부에 상의한 시각이 있는 거 같은데, 지역별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지역 본부 건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단 거구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어요. 청소년인권운동이 뭔지 모르거든요. 인권조례 제정한다면, 청소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몰라요. 왜 필요한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소책자든 웹이든 매뉴얼을... 시급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구. 6월 지나면 몇 개월 뛰다보면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대중적 운동이 되게 해서 하반기에 그걸 모아낼 수 있는 전국 대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학문적 논리적 상식적으로 대중적 확산을 할 수 있는 대회까지 봤으면 좋겠고. 일련의 타임스케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깁 습니다.

누리 : 우리가 승산이 있으려면 싸움을 더 크게 붙여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처럼. 선거 쟁점이 되고 전국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들구요. 3월 7일 이때가 주요 시점일 거 같아요. 학생인권 사안,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쟁점을 굳히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과 다르게 맥을 달리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3월 7일 시점에 다른 지역이 같이 예컨대 서명 운동 같은 것들을, 전국화하겠다, 이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가 있어야지 않을까.

송원찬 : 인간띠 잇기 할까요

개굴 : 애기 마무리하자. 좋은 제안들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각 단위들이 바로 결정하기는 무리다. 일단 교육감 선거시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게 필요한 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3월 7일 구체적 일정이 잡혀있고 시기별 대응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경기 학생인권조례는 다산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기별로 필요한 활동들을 제안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각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자. 그건 다 계획이 된 거 같구요. 여론이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서, 각 단위에서 필요한 설명회나 워크숍을 해나가는 과정. 그것과 관련해서 서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직하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전국화에서는 전국운동본부 건설 등이 제안되었지만, 구체적 조직 건설까지 가지 않

더라도 공감대 있는 단체들이 소통할 구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박진 : 그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교육감 선거 앞두고 너무 무수한 연대 조직들이 제안되고 있어서 이 피로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국면 같구

송원찬 : 현실적 판단을 할 때 어떠냐 하면 기왕 조직들 속에 지역마다 교육감 선거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가 다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반영이 되어서 공동으로 주체들이 선다면 액션들을 취하는 공동행동 이런 것들 하는 게 현실적 판단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요.

평등학부모회 : 3월 9일 이후에 후속 모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제안을 했다는 기록은 남겨두고, 9일 이후 어떻게 할지... 실제로 평학 같은 경우도 지역에 연대체 다 들어 있는데 또 만든다면 피로도는 장난이 아닌데, 전국적 운동으로 응집력을 가지고 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전국적 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로 생각하면서 후속모임을 3월 9일 이후에 잡으면 어떠냐는 거구요. 저도 교육감 선거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

박진 : 구체적 제안을 드리면 네트워크 구성하는 정도는 합의를 해서 저희가 메일링리스트 정도 개설을 하구요 끊임없이 경기도 상황 이런 거 소통하는 정도 가칭으로 학생인권조례 전국화를 꾀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일링 리스트 하나... 어쨌든 그거는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개굴 : 일단 3월 7일 분위기를 보면서, 제안드린 단위들이 후속 자리를 긴급하게 시일 보면서 제안하고 그 동안 각 단위에서 할 일을 최대한 하고, 응집된 목소리로 행동으로 보여줄 구체적 계획을 갖고 다시 모이는 것으로...

**다음모임**

**3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역 민주노총 알아보기**